

입학처장 좌담회

- 일시 : 2008년 1월 23일(수) 10시
- 장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의실
- 진행 : 박제남(인하대 입학처장)

- 참석자 : 김영정(서울대 입학본부장), 이건휘(원광대 입학부처장), 이재용(연세대 입학처장), 조태흠(부산대 입학본부장)
- 정 리 : 최두현, 정수경(대교협)



진행자 : 새 정부의 대학교육 자율화 정책 중 입시정책에 대한 입학처(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 하였습니다. 지금 3단계 입시 자율화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전형요소 반영 비율을 각 대학에서 정하는 것이고, 2단계는 수능과목 축소, 3단계에서 완전 자율화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우선, 자율화란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자율화의 정의

연세대 이재용 처장 : 우선, 대학마다 수월성중심, 교육중심 등 특성화가 다릅니다. 입시에서의 자율이란 각 대학 특성에 맞는 학생을 각 대학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대한 책무성, 공공성을 갖는 것은 물론 당연한 전제입니다. 결국 진정한 자율이란 교육은 교육을 위한 목표로 가야지, 교육이 다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부산대 조태흠 본부장 : 큰 틀에서는 연세대 이재용 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전형비율, 논술출제 방향 등을 대학에 맡기는 것 등을 진정한 자율화라 할 수 없으며, 원래 대학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율화 항목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입시 자율화는 대학이 인재선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전형을 개발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새 정부의 대학입시 자율화 설정 방향은 옳다고 보지만, 입시 자율화가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정상화, 과도한 입시 부담 경감, 해소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

면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하는 철학적 성찰이 우선되어야 하고 자율화를 위해서는 고등학교나 대학 모두 나름의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진행자 : 지금 지적하신 수단의 대표적인 것이 사교육비 경감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교육비 경감을 내세우는데 실제로 사교육비와 입시 정책과의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1945년 이후 전형제도가 13번 바뀌었는데 본래 대학에는 선발 주도권이 있었으나, 대학의 부패 등 전력 때문에 주도권이 정부로 넘어갔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주도권이 대학으로 넘어오는 것이니 책무성을 가지고 잘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 사립대학으로서 원광대 이건휘 부처장님께서 자율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광대 이건휘 부처장 : 우리 대학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시모집에서 정시 지원자 분포가 1~5등급까지 다양하고, 변별력 문제, 학생충원 문제, 우수학생 유치, 교육 문제 등 전체 대학이 지닌 문제를 다 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율화에 대해 주요 대학은 환영하겠지만 지방대학에서는 주요 대학과 종속되는 여러 고리 때문에 환영할 수만은 없습니다. 호남권에 있는 30여 개의 대학 중 상당수 대학이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 자율화까지 가해지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국가에서 통제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서울대 김영정 본부장 : 앞서 여러 처장님들께서 제하고 싶었던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율이란 외적요인으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대학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던 핵심적인 외적요인은 바로 정치적인 이해득실이었습니다. 정치가들은 국민의 표를 필요로 합니다.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거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국민을 현혹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많은 주요 부분은 사회의 제반 영역과 얽혀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무리수가 발생합니다.

다. 결국 현실적으로 대학교육 자율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치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정부는 최소한의 조정 기능만 갖고 모든 것을 대학에 일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율화와 책무

연세대 이재용 처장 : 자율화에 관해서 각 대학의 입장이 달라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자율화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각 대학 특성에 맞는 전형요소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생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상위 몇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대부분 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듯 한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율화는 다양화입니다.

서울대 김영정 본부장 : 이재용 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지금까지 대학은 입시 직전에 전형 방법을 바꾸는 등 신뢰할 수 없는 변칙적 형태들의 입시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변칙적 운영에 대한 조정기능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또한 입시정책에 있어 주요 대학이라 일컬어지는 서울대-연·고대간의 고리, 연·고대-수도권-지방대학간의 고리들이 끊어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며, 사전 정지 작업도 필요합니다. 자율화는 분명 옳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진행자 : 원광대 부처장님이 말씀하셨던 문제의 염려는 이해하지만, 의학벨트와 같은 원광대만의 강점은 분명 있습니다. 그 강점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고된 각 대학의 입시정책을 결정했으면 반복하거나 바꾸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대 조태흠 본부장 :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재 각 대학의 입시정책에 일선 지역 고교의 요구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학부모들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입시안과 비슷하게 만들도록 요구하는 등 외부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드릴 말씀은 다양화가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수능 점수가 대학 서열화를 조장한 것이 사실이고, 수능 비율을 낮추면 학교 질이 떨어지는 듯 한 인상을 줄 수 있다며 교내 구성원이나 학부모들의 비난이 빗발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자율화가 되어 잠재력, 창의력, 리더십, 가치관 등 주관적 전형요소로 학생선발을 하였을 때 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서울대 김영정 본부장 : 현재 입시정책을 보면 선행적으로 정지 작업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먼저 새 정책이 실시되면서 제도 자체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고 기현상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이러한 것들이 책무성이란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의 입시제도가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종속성이 있어, 고등학교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김영정 본부장 : 고등학교 현장과 대학과는 서로 사정을 알고 최선의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련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입학사정관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정관제 정착 등 전제 조건이 이뤄지는 것에 따라 자율화 범위를 늘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정관제가 시행되면 고등학교 특성에 맞게 대학은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고, 만들어진 평가 시스템을 고등학교에 정보로 제공해 주는 식으로 서로 학생들의 자질 등을 보고 선발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수능, 논술 등 너무 객관화된 지표만으로 정형화 된 틀에 맞춰 학생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깨는 어떤 단계를 지나 다양화 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산대 조태흠 본부장 : 책무성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고등학교 생활과 대학은 별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등학교 생활을 그 자체로 인정하지 않고 대학 입학에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만 여기고, 대학 또한 고등학생들의 생활 그 자체를 평가하기 보다는 그들의 지적 능력만을 평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야 하

고, 그 생활 자체를 대학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대학입시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이루는 책무성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학교생활을 충실히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학생부는 그 역할을 하는데 많이 미흡합니다.

연세대 이재용 처장 : 고교-대학간의 이해관계에서 대학은 비학력평가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는 비교과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대학은 그 평가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 김영정 본부장 : 사정관이 늘어나면 제일 먼저 할 것이 고등학교 현장 방문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평가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산대 조태흠 본부장 : 변화가 고등학교부터냐, 대학부터냐의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것입니다. 부산대도 사정관제를 준비중인데, 이 때 수능이나 내신과 같은 성적순보다 잠재력, 창의력, 리더십, 가치관 등 주관적 전형요소로 학생을 선발했을 때 학부모나 사회에서 그 결과를 인정할지,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닐지 염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사회 내부의 신뢰 구축이 필요합니다.

연세대 이재용 처장 : 우리 대학은 사정관제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현재 사정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등학교 생활을 평가하기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소가 평가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시스템이 같이 고쳐져야 합니다. 고등학교는 평가 요소를 개발하면서 교과 이외의 어느 것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 김영정 본부장 :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입시제도를 가시적 효과를 위해 단시간에 고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치기 전에 필요한 선행 조건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수능과목의 축소

진행자 : 다음으로는 현 인수위에서 자율화 단계 중 수능과목을 축소하는 것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대 김영정 본부장 : 수능과목을 줄이는 것은 좋다고 보지만, 수능과목이 교과 과정에 영향을 주고 교과 과정이 변화하면 교사지도방식 등이 함께 변화하는 식의 보완이 수능과목 축소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산대 조태흠 본부장 : 수능과목의 축소 문제는 대학과 고등학교의 입장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대학에서는 수능 과목을 축소할 경우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학업 능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연대학과 공과대학에서는 고등학교에서 꼭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아 대학입학 후 필요 과목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수업이 수능 중심으로 되면서 정상적인 교과운영에 파행이 올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교사수급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과 운영과 대학의 기초학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대 이재용 처장 : 7차 교육과정대로라면, 수능에서 공통과목은 축소하고 심화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심화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학생 선발의 또 다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과과정이 있으면 평가는 당연히 따라야 하고, 제대로 평가된 내용을 대학이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평가방법이 없으면 결국 본고사와 같은 형태가 다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7차 교육과정에 관해서, 학생들은 국가에서 정한대로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한 것으로 과거부터 합의되어 시행해 온 일입니다. 자율화가 되어도 과거에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켜주는 것이 대학의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보 공시 등도 책무성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 김영정 본부장 : 대학에서 필요한 교과목 등에 대해서는 미리 공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 이재용 처장 :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합니다. 고등학교도 대학입시에만 맞춰서 교육하는 것은 고등학교의 책무성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등학교나 대학 모두 책무성을 가져야 합니다.

서울대 김영정 본부장 : 자율이라는 개념에 따라 책무성의 개념은 달라지겠지만, 고등학교와 대학이 책무 또한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원광대 이건휘 부처장 :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수능과목이 축소될 경우 서울 주요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 이외 과목에 대해서 지방대학에서는 아마도 공식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행자 : 결국 교사 수급정책과 연결되어 파장이 클 듯 합니다. 수능 과목 축소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은 소위 논술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대교협에서 논술 가이드라인 발표¹⁾도 있을 예정인데, 우선, 현행 논술 가이드라인의 개념을 서울대 김영정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논술 가이드라인

서울대 김영정 본부장 : 교육부에서 발표한 논술 가이드라인 자료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잘 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학·과학과 관련된 논술에서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출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 발표자료를 잘 보면, 단순히 공식을 암기해서 답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출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고교 교육과정 수준을 고려한 난이도 조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자율화를 애

1) 대교협은 2008년 2월 4일 학생선발의 자율화 차원에서 논술 가이드라인은 폐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음.

기하면서 또 다른 논술 가이드라인을 대교협이 만들어 발표한다는 것은 결국 교육부에서 하던 것을 대교협에서 하는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대 이재용 처장 : 실제로 자율화 된다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의 올바른 평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교과 평가인 수능의 변별력만 있으면 본고사는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논술을 만들어낸 이유도 변별력을 갖기 위한 것이었는데 수능이 변별력을 갖는다면 논술은 논술 본래 기능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규제라 여겨지는 말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대교협의체에서 굳이 가이드라인 등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김영정 본부장 : 수능과 논술의 평가 방식은 다릅니다. 수능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논술이 등장했다는 말씀에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 수능이 변별력이 있어도 논술은 논술 본래의 기능으로 시험이 치러져야 한다고 봅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라는 난이도 문제 아닐까요?

서울대 김영정 본부장 : 그 해석은 참 애매하고 포괄적입니다. 논술 문제를 너무 어렵게만 출제하여 풀 수 있는 학생들이 없다면 이것 또한 변별력이 없으므로 대학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 혼란 방지 방안

부산대 조태흠 본부장 : 각 대학에서 수험생을 위하여 상반기까지 예시문제를 3~4차례 발표해 수험생에게 편의를 주고, 적어도 2009학년도는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된다고 알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에도 예시문제는 제시했었고 이미 논술 시험을 치른 기출문제까지 있으니 어찌하면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연세대 이재용 처장 : 부산대 본부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규제를 어떻게 하고,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세우겠

다는 것 보다는 본고사가 없다는 확인 공지와 함께 예시 문제 등을 내보내 수험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산대 조태흠 본부장 : 고등학교 교육과정 등에 대한 해석 문제는 대학마다 다르고, 자율화를 논하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이라는 또 다른 제재를 가해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대 김영정 본부장 : 현재의 논술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해석해서 밝혀주고 예시문제를 공개하여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으로 지켜오던 것을 새로 바꿔 만들면 대학과 수험생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새로 만들어서 안 지키면 교육부의 제재가 가해지는 등의 과정은 결국 과거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시제도는 누가 봐도 수긍될 만한 것만 고치되, 자주 바꾸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광대 이건휘 부처장 : 지방대학 입장에서는 현재와 같이 수능으로 서열화가 된 상태대로라면, 내신 실질반영을 정도는 일정 기준으로 정해놓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부산대 조태흠 본부장 : 특성에 맞는 전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대학은 내신 반영율을 높여 지역의 우수한 아이들을 선발하는 등,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전형을 개발하고 그에 따라 전형 요소 비율도 대학이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울대 김영정 본부장 : 내신 실질 반영률 같은 부분은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이 자신의 특성에 맞게 사회적 책무를 잘 이행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사회적 책무를 심각하게 저버릴 경우를 대비한 정부의 최소한의 조정 기능은 필요합니다.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일정 부분 재정 지원 등의 융통성은 허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연세대 이재용 처장 :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한 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갖고 대학이 보여주면 될 것입니다.

원광대 이건휘 부처장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히 요소의 %를 정하자는 것보다는 현 고3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올해 입시를 치를 학생과 학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연세대 이재용 처장 : 어려운 얘기입니다. 등급제 제도가 바뀌니까 더 혼란스러운 것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등급제가 변별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정도 보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대 김영정 본부장 : 수험생 입장을 생각해야 합니다. 등급제의 유지 여부에 따라 전형요소의 중요도가 달라지고 대응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등급제에 관해서는 1년 정도라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대 조태흠 본부장 : 등급제도 전형제도의 하나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학생 선발에 가장 필수적인 변별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험생이나 대학 양측 모두로부터 불만을 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행자 : 등급제 문제는 이쯤에서 정리하고,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세대 이재용 처장 :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년 수준으로 입시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김영정 본부장 :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입시안은 너무 복잡합니다. 다양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화 했으면 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원광대 이건휘 부처장 : 수시는 다양화 하고, 정시는 좀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 2009학년도는 각 대학들이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줘야 할 것입니다.

부산대 조태흠 본부장 : 이제 자율화가 되면, 입시 혼란의 직격탄은 대학 몫입니다. 정보공시 등 서비스를 정확, 신속, 다양화 하여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세대 이재용 처장 : 본고사가 부활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확실히 알려주고, 예시문제도 제공해주며, 입시안

일정 발표 기한도 모든 대학들이 다 지켜야 할 것입니다.

진행자 : 오랜 시간 다양한 논의에 감사합니다.